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7일 (음력 12월 2일) 월요일

전두환씨 오늘 광주 재판 출석하지 않을 듯

“합법의 탈을 쓴 꼼수는 이제 그만...법 앞에 특권 있을 수 없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 사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7일로 예고된 가운데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일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전 씨 측이 법원에 또다시 기일변경을 신청한 사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한 불신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도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 씨가 7일에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난 두

광주지법, 오후 2시 진행...지난해 8월에도 무단 불출석

“법 앞에 특권 있을 수 없어...강제구인 절차 밟아야”

번째 무단 불출석인 만큼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 재판을 진행한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증소식은 없었다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지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지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

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 측은 그동안 연기 신청과 관할 다툼을 거듭해 왔다. 소송 절차용 이용,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광주에서 재판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 범위 내 또다른 꼼수(?)는 어렵게 됐다.

전 씨 측은 신경쇠약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또다시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전 씨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이번에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씨의 출석 의무가 부여된 첫 재판 기일은 지난해 8월27일이었다.

당시 전 씨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가 7일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 등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 씨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지부장은 "전 씨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과 똑같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누구든지 법 앞에 특권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이순자 씨는 인터넷 극우 보수 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같다"며 7일 재판 출석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신봉우 기자



인간북극곰들 차가운 겨울바다에 풍덩 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제32회 해운대 북극곰 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 등 인간 북극곰 5500여 명이 일제히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Photo漫評

망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사지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을 깎아내리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야기는 '재판장도 어떤 압력을 받는 것이냐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남편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민주화의 아버지'로 지켜세웠다. 이씨는 5년 단임제를 거론하며 전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뤘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 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실성에 가까운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 "그렇다면 민주주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민주주의 누나는 박근혜냐고 반문했다. 관련 인사의 추배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이순자



설훈



박지원

‘애물단지’ 서울소재 ‘전남농수축산물유통센터’ 축소 vs 폐쇄 기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울 소재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가 축소나 폐쇄의 갈림길에 놓였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는 건축면적 1682㎡, 연면적 1만2627㎡,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로 총 사업비 217억원(전남도 부지매입비 103억원·민간업자 건축비 114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6월에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자유치(BTO)로 유통센터를 건립해 민간업자가 2030년까지 운영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지하 1층 마켓, 지상 1층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매장·홍보관, 2층 전남 공예품판매장, 3층~5층 사무실 등을 입점했다.

하지만 매출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재 1층 판매장을 빼고 애초 취지와 달리 커피숍, 오락실, 미용실, 의료기구 판매장 등이 들어섰다. 실제 1층 친환경 판매장에서 낸 매출액은

2012년 4억2000만원, 2013년 1500만원, 2014년 1900만원, 2015년 1억6000만원, 2016년 8700만원, 2017년 1400만원 등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와 전문가, 사업자 등이 머리를 맞대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센터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센터 운영방식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센터가 들어선 건물의 '노른자'인

1층 친환경 매장을 축소하거나 일시 폐쇄하는 대신, 다른 업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투자대비 수익이 저조한 운영권자 입장에서 센터 자리에 장사가 되는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에 있어 센터 주변의 재건축 완료사업인 2023년이 준공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센터의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을 살리기 위해 운영권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The 청렴하면

행복해요!

